국별 리포트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6.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2

Ⅴ.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960만 km^2	G D P	5조 3,176억 달러 (2010년)
인 구	13.4억 명 (2010년)	1 인 당 GDP	4,440달러 (2010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 화 단 위	元 (RMB)
대 외 정 책	전방위 실리 외교	환 율(달러당)	6.77 (2010년 평균)

□ 중국은 한반도의 43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로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을 포함하여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의 기치 아래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됨. 이에 균부론(共富論)으로 경제발전을 전환하여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종전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확보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장을 견인

○ 2009년부터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부진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유지, 소비용 보조금 지급 등에 따라 2010년 경제성장률은 10.3%를 기록함.

- 2010년 고정자산 투자는 4조 위안 규모의 내수부양 정책의 하나로 진행된 대형 인프라 확충과 도시화 사업 지속 등으로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11.9% 증가한 17조 위안에 이름. 이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의 대 GDP 기여도가 5.3% 포인트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의 견인에 큰 역할을 함.

- 소비부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위축된 대외수요를 타개하기 위한 내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2009~10년 동안 실시함. 이에 힘입어 2010년 소매판매 총액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5조 4,554억 위안을 기록함.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인상이 일시 중단되었던 최저임금도 소비 진작을 위해 2010년에는 전국 30개 지역에서 평균 22.8% 인상됨.

○ 2011년 대외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투자 지속과 소비확대 유도에 따라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도 정부는 12차 5개년(2011~15년) 계획에 따라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해 민간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반면, 수출의 경우 선진국 경제회복 지연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f]
경 제 성 장 률	14.2	9.6	9.2	10.3	9.0
재 정 수 지 / G D P	0.2	-0.8	-2.7	-2.1	-2.1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4.8	6.0	-0.7	3.2	5.0

자료: IMF, EIU.

□ **전년도와 비슷한 2%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0년에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충, 보조금 지급 외에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을 늘렸음.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GDP 대비 2.1%를 기록함.

○ 2011년에도 12차 5개년 계획 하에 7개 신흥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등 조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기조 유지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7개 전략적 신흥산업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첨단장비 제조, 방송·통신·인터넷 융합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산업임.

□ **식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여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에 연 3.2%를 기록함.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은 일기 불순에 따른 농산물 공급 곤란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과 경기부양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등임.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과 홍수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 등으로 정부 목표치인 4%를 상회하여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의 성과 미흡

○ 효율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국유기업 중심의 대형화를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생산능력 과잉 업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중복건설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진입 요건을 강화함.

-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고도성장에 주력하고 있어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음성적인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은행부실 채권 증대 가능성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함.

○ 지방정부 부채는 채권 발행과 은행대출에 따른 것으로 그 규모가 2010년 말 기준 중국 GDP의 27% 수준인 10조 7,000억 위안(1조 6,500억 달러)에 달함. 이 가운데 3조 5,000억 위안이 부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3월 기준 중국 은행들의 무수익여신 비율이 1.1%이나 지방정부 부실위험을 고려하면 무수익여신 비율이 1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확대

○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위안화 환율 왜곡 등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이 2009년 9월 중국산 타이어에 35% 덤핑관세를 부과함. 이에 중국이 미국산 닭,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데 이어 음료, 분유 등에 대한 통관을 금지함. 2010년 9월에는 미국이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11.25~60.85%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함. 이에 중국도 미국산

닭 제품에 대해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함.

- 또한 중국이 최근 자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희토류, 인, 보크사이트 등의 수출쿼터를 축소함에 따라 교역 상대국들이 WTO에 제소하고 있음.

□ 노동자 권익강화로 인한 노동유연성 악화

○ 2008년부터 노동자 권익보호 위주로 노동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노동분쟁 사례가 급증하는 등 노동유연성이 악화되고 있음.

- 노동자 권익보호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를 종신 고용화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근속 또는 2회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다시 계약할 경우 종신 고용을 보장함. 또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해고 시에는 노조와의 사전협의 및 노동관리 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함.

나. 성장 잠재력

□ 균형발전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진

○ 정부는 지역 간,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전환하였음. 이후 그 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 등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형 인프라 확충과 도시화 사업 지속 등을 통한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적극적인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확대 추진

○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수준 제고,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월 2,000위안 → 3,500위안),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 및 연금보험, 교육 확대 실시, 중서부로 산업이전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12차 5개년 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할 계획이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해 9월부터 상향조정하여 실시하기로 함.

□ **첨단기술제품 중심의 수출상품구조 고도화 추진**

○ 정부는 수출상품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R&D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노동집약적, 고오염·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음.

- 첨단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 비율을 상향 조정함. 그러나 2010년 7월 철강, 의약, 고무 등 총 40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전면 폐지하였고,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 석유 등에 대한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인프라확충과 내수진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고자 인프라 확충과 내수 진작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 2009~10년 동안 4조 위안의 고정자산 투자를 실시하여 경기를 부양함(철도, 도로 등 인프라투자에 1.8조 위안,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1조 위안 등). 2011년에도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철도, 도로 등 수송 인프라와 발전소 등 에너지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를 지속할 예정임.

□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및 지준율 상향조정과 부동산부문 규제로 적극 대응**

○ 중국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버블발생과 물가 억제 등을 위해 2011년에 기준금리를 3차례, 지준율을 6차례 상향조정함.

- 2010년부터 2011년 7월 초까지 1년 만기 기준금리를 예금은 2.25%에서 3.50%로, 대출은 5.31%에서 6.56%로 인상함. 지준율도 15.5%에서 21.5%로 수차례에 걸쳐 인상함. 또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준율 외에도 금융기관 대출억제 등을 통해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하반기에 통화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011년 1월 4.9% → 2월 4.9% → 3월 5.4% → 4월 5.3% → 5월 5.5%

○ 한편, 부동산부문 대출규제 조치도 실시함.

- 부동산부문 대출 규제는 2010년 4월 실시된 이후 2011년 1월부터 더욱 강화되어 ① 90m2 이상 1가구 1주택 구매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 비율을 최저 40%로 적용(90m2 미만의 경우 자기자금 부담 비율은 최저 20%로 적용), ② 대출금리를 최저 기준금리의 1.1배 적용, ③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60% 이상의 자기자금 부담, ④ 35개 주요 도시에서 세 번째 주택 이상의 신규구입 금지, ⑤ 충칭, 상하이시에 부동산 보유세(매년 주택가격의 0.4~1.2%를 납부)를 시범 도입함.

- 2010년 4월 부동산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2.8% 상승하여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부문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어 2011년 4월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4.3%를 기록 중임.

□ 위안화의 국제화 보폭 가속

○ 위안화 무역결제화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2009년 7월 상하이, 광둥성 등이 홍콩, 아세안 국가와 시범 시작한데 이어, 2010년 6월에 중국 전 지역에서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시행함.

- 2010년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이 2%였으나 2011년 1~4월에 7%로 확대됨. 위안화 결제는 수입결제가 수출결제보다 훨씬 많음.

○ 또 홍콩에서 위안화 계좌 개설 및 위안화 상품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외국기업들에게도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10년 ADB가 홍콩에서 12억 위안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World Bank도 2011년 1월 홍콩에서 5억 위안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10년 상품수지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42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를 지속함. 경상수지는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 증가한 3,0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2010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조 5,814억 달러, 1조 3,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4%, 39.1% 증가함. 이는 2009년의 수출증가율 -16.1%, 수입증가율 -11.1%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것임.

- 한편, 소득수지 흑자는 2.8조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 이자 수입에 기인함.

○ 2011년 상품수지는 내수진작에 따른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도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와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2,503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임.

□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최대

○ 2011년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3조 447억 달러에 달함.

- 중국은 2006년에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한 이후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2조 8,473억 달러에 이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2006년 727억 달러, 2007년 835억 달러, 2008년 1,083억 달러, 2009년 950억 달러, 2010년 1,057억 달러(추정치)

○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에 따른 위안화 저평가 논란을 완화하는 한편, 자원확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M&A) 실적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380억 달러를 기록함. 대표적으로 중국 민간자동차 기업인 지리(吉利)자

동차는 볼보(Volvo)자동차를,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國海洋石油總公司)는 미국 텍사스 남부 이글 포드지역의 오일셰일(oil shale) 지분 30%를 인수함.

* 지난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해외 M&A 시장에서의 비중이 2.2%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7.5%로 상승하며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

○ 위안화 가치 상승은 매년 수천억 달러씩 증가하는 외환보유액 외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등의 지속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함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3년간 약 21% 절상되었음. 이후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7월부터 다시 위안화를 달러에 페그시켜 오다 2010년 6월에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함.

* 관리변동환율제 실시 이후 2011년 6월 30일까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5.2% 상승한 1달러당 6.4716위안을 기록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f]
경상수지	371,833	436,107	297,142	305,400	250,339
경상수지/GDP	10.6	9.6	5.9	5.2	3.6
상품수지	315,382	360,680	249,513	254,200	202,354
수출	1,220,000	1,434,600	1,203,800	1,581,400	1,860,664
수입	904,618	1,073,920	954,287	1,327,200	1,658,310
외환보유액	1,530,282	1,949,260	2,416,044	2,847,000	3,124,600
총외채잔액	389,200	390,200	428,700	472,700	516,800
총외채잔액/GDP	11.1	8.6	8.6	8.9	8.7
DSR	2.2	2.0	2.3	1.9	1.8

자료: IFS, EIU.

-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2005년의 2,017억 달러에서 2010년에 2,730억 달러로 확대됨. 이에 따라 미국은 여전히 위안화 가치가 최소 20%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2005~08년 관리변동환율제 시기에 비해 절상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으며, 환율정책을 경제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고수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도 가미된 것으로 보임.

□ 양호한 외채상환 능력

○ 2010년 말 총외채잔액은 4,727억 달러로 절대규모는 큰 편이나 GDP 대비 8.9% 수준이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도 총수출 증가에 힘입어 1.9%로 낮은 수준임.

○ 2011년에도 총수출 증가에 힘입어 DSR이 1.8%로 더욱 개선될 전망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후진타오 중심 지도체제로 정치적 안정 지속

○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지도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후진타오는 국가발전 전략을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전환하였고,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농민소득 증대 등 빈부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 권익을 위한 분배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득격차와 소수민족 독립요구 등으로 잠재적 불만요인 표출

○ 외형상의 정치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집약적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6%를 상회하여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도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대졸인력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농촌은 2009년 기준 잉여 노동력이 2억 명에 달하고 있음.

- 한편, 소수 민족들의 독립요구 시위 등이 발생하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해 있음. 2008년 3월 티베트의 독립요구 시위, 2009년 7월 신장 위그루족의 시위, 2011년 5월 내몽고 자치구의 반정부 시위 등이 발생하여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3. 국제관계

□ 미국, 일본과 긴장관계 지속, 주변국과는 우호관계 유지

○ 미국과는 위안화 환율, 대만 무기판매, 오바마의 달라이라마 접견 등으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대 중국 상품수지 적자가 자국 실업 증가 등을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자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분간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일본과는 2010년 발생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문제로 긴장관계가 발생함. 특히 중국에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시에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반면, 대만, 러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경제협력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

- 대만과는 친대륙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당선된 이후 관계가 개선되었고, 2010년 6월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체결하여 양국 간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교류도 한층 활발해짐.

- 러시아와는 2008년 10월 국경분쟁 타결, 2010년 9월 극동러시아에서 중국 동북지역 다칭(大慶)으로의 러시아 송유관 개통 등 정치·경제적 우호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잔액 규모는 크나 대외지급능력 양호

○ 2010년 총외채잔액 규모는 큰 편이나 GDP 대비 8.9% 수준이고, 외환보유액이 2.8조 달러를 상회하고 DSR도 1.9%로 매우 낮기 때문에 대외채무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단기외채는 3,316억 달러로 총외채의 70.2%를 차지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높은 국가 신용등급 유지

○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바탕으로 OECD 2등급, S&P AA-/Stable, Moody's Aa3/Positive, Fitch A+/Stable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와 Moody's는 각각 2010년 12월과 11월에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막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1. 6.)	B1 (2010.10.)
OECD	2등급 (2011. 3.)	2등급 (2010. 4.)
S&P	AA- (2010.12.)	A+ (2008. 7.)
Moody's	Aa3 (2010.11.)	A1 (2009.11.)
Fitch	A+ (2011. 4.)	A+ (2007.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8월 24일(북한과는 1949년 10월 6일)

□ **주요협정:** 무역, 투자협정(1992년),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원자력협정, 세관협력협정(1995년), 복수사증협정(1998년), 어업협정(2001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7) 등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중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중국	2007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81,985	91,389	86,703	116,83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등
수 입	63,028	76,930	54,246	71,574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등
합 계	145,013	168,319	140,949	188,41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 지속**

○ 교역규모는 2010년에 1,8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대비 34.8% 증가한 1,168억 달러, 수입은 31.9% 증가한 715억 달러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등임.

- 교역측면에서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중국의 수출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점과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내수시장 확대분야

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임. 일례로, 2009년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LCD, 휴대폰, 차량부품 등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음.

* 이는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재수출되고 중국 역시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인

□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국 지위 유지

○ 우리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2만 1,897건, 약 332억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 미국(342억 달러)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투자금액의 76.6%로 가장 많고, 금융 및 보험업(6.5%), 도매 및 소매업(5.4%), 건설업(2.3%) 등의 순임.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 IT 분야의 비중이 27.8%로 우리나라 대 중국 투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투자지역별로는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투자금액 비중은 2.8%로 미미한 수준임. 투자목적별로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 활용목적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현지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전체 투자건수의 62.3%를 차지함.

○ 향후 내수확대,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이 지속되고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유한 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컴퓨터, 자동차 등 내수 업종과 석유화학, 철강 제품 등 인프라 관련 업종 및 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 경제성장에 따라 비제조업, 특히 금융업, 보험업 등 서비스 부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분야의 경우 중국 정부의 우대정책 폐지,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노동정책 변화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오히려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Ⅴ. 종합 의견

○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수요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도시화 추진, 소비 촉진 등 내수진작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10.3%를 기록함. 2011년에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확대 유도 등을 통해 연 9%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경기부양책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거시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국 정부가 2011년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상, 부동산금융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지역 간, 도농 간 소득격차, 실업증대, 소수민족의 독립요구 등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중국 정부는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물가상승이 거시경제 안정의 걸림돌이지만, 지속발전을 위한 고정자산 투자 지속, 소비확대 유도 등으로 중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 또 현재 안정적인 국정운영 하에 외채상환불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박 종 국 (☎02-3779-5716)
E-mail: parkjk@koreaexim.go.kr